

# 道-3개 시, 바이오산업 육성 의기투합

### 전주·익산·정읍시와, 업무협약...지역별 산업 육성 김 지사, "긴밀한 협업체계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익산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체계를

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소재·장비 인프라 공유 및 협력 △바이오산업 국책사업 및 공동 R&D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지역 특화 기업 육성 및 상호 지원 등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바이오 산업 육성에 보조를 맞춰 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난 9월부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노상훈 캡컷종합기술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도내 혁신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해 바이오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3개 시에 구축된 바이오자원을 기반으로 산업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바이오분야 기업유치 및 공동 R&D 지원 등 긴밀하게 협력해 전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6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관련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시행

### 독립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

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024년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원을 지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해빙기 맞아 긴급 안전점검

### 4월3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3980여개소 점검 지반상태·기초부의 균열 등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따른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비탈면의 낙석,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산사태·급경사지·저수지 등 8개 분야 3,980여 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물의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에 취약한 급경사지, 옹벽, 절토사면, 도

로·하천 공사현장, 문화재, 저수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이다.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은 △비탈면 상태(균열,침하,배부름, 지하수 용

출 등) △튼튼 낙석 발생 우려 구간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사면의 손상 여부 △사면의 낙석 발생 가능성 △옹벽의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유무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성 작성 △흙막이 지보공 변형 손상 여부 △거푸집·동바리 침하·변형 상태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균열 여부 △문화재 건축물 지반 침하 등 분야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도는 각 분야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내 옹벽·석축, 절토사면, 급경

사지, 문화재, 저수지 등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사용금지·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 하겠으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조치완료 시까지 조치사항을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중록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시설물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전북자치도는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 3월 22일까지 도내 24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체계 및 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24개소로 그 중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6개소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 18개소는 동물병원 및 법인, 단체를 지정·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소속 포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확인,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사육, 인도적 처리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이다. /김재훈 기자

도는 점검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은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보호센터 지정취소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해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도내 9,0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3,330마리(36.7%)가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기증됐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시군 농산부서 과장, 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 관계자 및 쌀 들녘경영체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 대표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쌀 적정 생산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자치도내 벼 적정생산면적은 10만2,831ha로 전년 10만7,383ha 대비

4,552ha를 감축해 약 2만4,400톤 쌀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다. 감축면적 4,552ha는 가루쌀 1,877ha, 두류 1,298ha, 조사료·농지전용 등 1,524ha이다.

특히, 쌀 적정 생산면적 유지를 위해 전략작물지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

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는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양배추, 수박 등 기타작물은 200만원/ha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줄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으로는 신동진 등 중대립종자의 혼입으로 계약재배단지, 채종포 등에 디엔에이(DNA) 검사를 확대하고, 신동진 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 별 브랜드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체 채종포를 확대 운영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시·군, 농협, 생산자 단체 대표와 적극 협력하여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및 타작물 생산 확대로 쌀값 안정과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